

공론장 - 미디어 관계의 유형화

조항제** · 박홍원***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버마스의 공론장론은 숙의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념형을 제시하면서 근대를 복원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론장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응해 반비판도 제기되면서 공론장론의 지평은 확대되어 왔다. 특히 공론장이 정치를 공적, 제도적 담론에 치우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적, 감성적 측면을 배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론장론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감성적 공론장, 미학적 공론장, 표현적 공론장 등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개념들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공론장 논의를 분석적으로 해부하고 향후 이론적 발전을 위해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 글에서는 공/사적, 이성적/감성적 두 개의 기준을 사용해 기존의 공론장을 ‘정치적 공론장’, ‘대중주의’, ‘차이대원주의’, ‘친밀/프라이버시’ 등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특징과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들 서로 다른 유형의 공론장을 매개하고 조정하는 메타공론장 영역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설정하고 그 가능성 및 함의를 제시했다.

주제어: 공론장, 유형화, 다원주의, 대중주의

1. 문제의 제기

무페(Mouffe, 2005)가 ‘정치’(politics)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구분하고 정치적인 것의 복원을 주장했던 이유는 합의와 갈등을 대조시키면서 정치로 포괄되는 인간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관행과 조건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제도의 절차화로 상징되는 공식적 ‘정치’로는 합의보다 권력과 갈등, 적대 등이 특징인 ‘정치적인 것’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인데,¹⁾ 이 점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되어 온 숙의민주주의와 그 이론적 근거인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무페를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은 하버마스의 공론장론 역시 서구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편견과 계몽주의적 이상의 산물일 뿐, 정치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치의 영역이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문화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 문화정치론(더 넓게는 탈근대적 인식론)의 지론이기도 했다. 대중이 처한 현실과는 다르게 문화, 특히 대중의 문화를 보는 학문 장의 논리는 정치와 문화를 별개로 놓거나 불가피하게 둘을 관계 지워야 할 경우에는 ‘문화의 저급화’나 ‘정치의 미학화’(aestheticization)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가 정치를 해롭게 한다고 보는 것이었다.²⁾

그러나 역사가 웅변으로 보여주듯 근대 이후의 정치 무대는 현실적으로든 규범적으로든 ‘집적된

*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hcho@pusan.ac.kr)

**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hwpark33@pusan.ac.kr)

1) 무페는 이를 하이데거의 ‘존재적인 것’(ontic)과 ‘존재론적인 것’(ontological)에 비유한다. 관습적인 정치의 다양한 관행이 존재적인 것이라면, 사회가 제도화되는 방식 그 자체는 존재론적인 것이다(Mouffe, 2005).

2) 이는 전형적인 근대적 미학의 사고로 좌·우파에 공통적이다(Street, 2000).

다수의 주권’, 곧 ‘대중 주권’(popular sovereignty)이 주도해왔다. 또 이 다수와 대중문화는 그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 틀림없다.³⁾ 그렇다면 대중이 가지는 정치적 권리를 정당화하는 것과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폄하(또는 비정당화·비정치화)하는 것은 공존하기 어려운 모순이 된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에게도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며,⁴⁾ 이는 결국 정치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사고체계, 특히 근대적 정치관이나 문화관·미학관의 변화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의 정치변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기든스(Giddens, 1991)의 주장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들어 정치의 성격은 ‘해방적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변화했다. 해방적 정치의 이슈가 착취·불평등, 억압에 대한 해방과 자유, 기본권의 쟁취 등이라면, 이 해방적 정치의 성공이 낳은 하나의 산물인 생활 정치는 실제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욕구가 특징인 정치이다. 해방 정치가 제도적 정치 권리와 인간 삶의 기본적 ‘필요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생활 정치는 생활·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충분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베넷(Bennett, 1998) 역시 지금의 정치문화를 기존의 ‘시민적인 것’과 다른 새로운 것, 곧 ‘비시민적인 시민적인 것’(uncivic civic)으로 간주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참여, 정체성이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치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기존의 ‘재분배의 정치’에 맞서 어떤 문화나 집단의 정체성,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 표현권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인정(recognition)의 정치’나 ‘정체성의 정치’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치 또는 정치·문화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인식을 받아들여 공론장론 또한 최근 들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하버마스의 공론장론(Habermas, 1990)⁵⁾은 ‘공적 속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형을 제시하면서 근대를 새롭게 복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론장론은 공영방송이나 인터넷 같은 대중미디어가 공론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분적이었지만) 확인되면서 미디어 학계에서도 큰 주목거리가 되었고, 이러한 주목은 나중에 다시 하버마스의 관심(Habermas, 1992)⁶⁾을 불러옴으로써 공론장론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론장론 역시 최근의 현상적·이론적 변화와 연루되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여러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공론장론의 변화가 공론장 개념을 폐기하기보다는 이를 수정·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서⁷⁾ 그 변화를 기술·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희화를 도입하고자 한다.

3) 실제의 대중문화 소비에 대한 좌파 지식인의 규범적 비판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진정한 노동계급문화’론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McKee, 2005).

4) 이는 나중에 나오는 ‘문화적 시민권’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문화에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다수에 준 공민권을 회수해 엘리트정치를 정당화하는 것인데, 대의제의 현실을 앞세운 슈페터류의 민주주의론은 어느 정도 이를 보여준다. 미국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추출된 섯슨(Schudson, 2000)의 ‘감시적 시민’개념은 ‘권리의 주장에 기초한 공적 생활’ 모델, 곧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참여가 활발한 정체성 정치를 전제하면서 ‘교양적 시민’에서 볼 수 있는 기존의 시민권 기준은 일정하게 완화시키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문화에도 정치성을 부여하는 이중적 전략을 보여준다. 반주넨(Van Zoonen, 2005)에 따르면, 이는 지금 시점에 어울리는 ‘탈근대적 시민권’이다.

5) 잘 알려진 대로 이 책의 독일어 원판은 1962년, 신판은 1990년, 영역판은 1989년에 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신판의 한글 번역판(Habermas, 1990)을 이용했다.

6) 독일어판(1992)의 한글 번역판(2000)을 원용했다(영문판은 1996).

7) 최근 한국의 철학계에서도 하버마스를 넘어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유주현, 2007).

유형화(분류)는 원형이 가진 속성이 내외부적 자극을 만나 일정하게 변화했을 때 그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 시도는, 첫째, 공론장론의 변화가 정치·미디어 현상 전반—이슈·장(field)·주체·표현 등—에 걸쳐 나타난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렇게 현상/이론이 병행되면 현상적 변화에서처럼 이론 사이에도 연속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인식론적 측면에서 공론장론을 비판한 탈근대주의가 근대를 부정하면서도 사실은 근대가 제기해놓은 숙제(의 해결)에 많은 것을 의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문제의식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최근의 절충론이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 판단은, Dahlberg, 2005; Dahlgren, 2009; Karppinen, Moe & Svensson, 2008). 완전한 질적 변이가 있다면 유형화의 설명력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유형화는 일정한 기준 아래 복잡화·다양화된 이론을 정리·통합하면서 각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는 절차를 밟으므로 이 글 역시 이런 일반적인 과정을 따를 것이다. 먼저 공론장론의 현상과 이론의 변화를 기술하고 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유형화의 기준을 찾을 것이다. 공론장론의 기존 틀을(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만큼 이에는 기존 유형화의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각 유형의 공론장(론)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의의와 내부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론장들 사이의 상호(비판·보완)관계의 중요성, 상호교차의 현실이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유형의 공론장들을 매개하고 조정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바람직한 공론장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미디어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서론의 말미에 한 가지 확인해둘 점은 이 글이 공론장론에 불가피하게 참여하기는 하지만 공론장론 자체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은 공론장론의 논쟁·다양화과정에 나름의 논리로 접근하지만 가능한 그 철학적 진위 여부나 찬반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⁸⁾ 이 글의 목적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과 동향을 포착할 수 있는 공론장론의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2. 공론장의 유형화

1) 기존 유형화의 재검토

이 논의의 출발점은 공론장론이다. 주지하다시피 공론장론은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서 공적인 것 또는 공중이 가지는 위상을 재평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점은 공론장론이 정치의 무대를 ‘공적인 것’에 국한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사적인 것’, ‘대중’, ‘비밀스러운 것’(Ku, 2000)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의 강조(또는 공사의 구분)와 그에 따른 포용과 배제는 이후의 공론장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버마스는 사회를 다시 구성원들의 세계인 ‘생활세계’와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정치·경제의 ‘체계’로 나누는데, 이 또한 전통적 공론장론

8) 일례로 최근 로윙과 모터(Lochwing & Motter, 2009)는 ‘대안적 공론장(들)’을 주창하는 논자들을 비판하면서 하버마스의 원래의 문제의식을 새삼 강조하는데, 이 점에 대해 이 글은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즉 전개과정 자체만을 이해하고 주목할 뿐이지 ‘꼭 공론장이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 규범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을 굳이 명명한다면, 본문에서 나올 달그렌처럼 ‘적극적 절충론’이라 할 수 있다.

을 이루는 중요한 구분이다. 이를 앞서의 공적/사적 구분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은 2X2의 유형화가 가능해진다.

<표 1> 사회의 영역들

	공적	사적
체계	국가	경제
생활세계	공론장	사적·친밀의 영역

*출처: 리빙스톤(Livingstone, 2005b, p. 172).

이 유형화는 모두 한 연구자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물론 ‘사적인 것’에 대한 프레이저의 정리도 도움을 주었다; Fraser, 1992)이므로 각 영역 사이에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작고, 그만큼 개념적·경험적으로 각자의 영역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재검토의 여지를 남긴다.

첫째, 이 유형화에서 분화된 각 영역은 각자의 고유 논리가 있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그 안에서 자기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능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특히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체계/생활세계 사이가 그러한데, 예를 들어 ‘경제’가 자기 영역을 넘어 ‘공론장’이나 ‘사적·친밀의 장’에 들어오거나(이른바, ‘사사회’) 또는 더 크게 체계 전체가 생활세계로 들어와 특유의 (행정)권력이나 화폐 같은 자기 매개를 퍼뜨리는 것은 생활세계의 고유 가치인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식민화’). 이 점은 생활세계의 한 영역인 공론장이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규범을 얻게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분화는 주목하면서 각 영역의 상호관계가 가져야 하는 규범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한 ‘자율’은 생활세계가 체계에 미쳐야 할 바람직한 영향 또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영역 간 상호교차나 투입이 보편화되어 각 영역의 자율적 재생산체계가 흔들릴 경우 이 유형화는 적실성을 잃게 된다.

둘째, 이 유형화는 프레이저(Fraser, 1992)를 원용해 사적 영역을 크게 두 가지, 즉 ①시장 경제에서의 사적 소유권과 ②친밀의 영역(성 생활을 포함한 가정의 영역)으로 나누었지만, 실제 가정적·경제적 장에서도 작동하는 권력관계가 ‘사적’이라는 이름 아래 공론장의 이슈(곧, 정치)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프레이저의 문제의식은 반영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레이저는 남녀간, 빈부간 관계가 친밀이나 경제의 영역으로 구획 지워져 공론장에서 제외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사적 영역을 두 가지로만 보면, 실제 공론장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양심이나 프라이버시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⁹⁾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장과 사적 영역 사이에 사적 정치를 다룰 수 있는 ‘제3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는 이를테면 개인의 단순 ‘정체성’과 집단 정서로서의 ‘정체성 정치’를 분리하여 고려하고¹⁰⁾(이 차이에 대해서는, Bernstein, 2005), 경제 역시 체계로만 다룰 것이

9) 하버마스는 프라이버시 부분을 ‘시민적 프라이버시’와 ‘가족·직업적 프라이버시’로 나눈 적이 있는데, 후자가 소비자나 경쟁적 성취를 위한 (직업)교육 같은 것을 가리킨다면 전자는 정치적 관심은 있으나 참여는 하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 조심’을 말한다(Habermas, 1975; Hove, 2007, p. 85에서 재인용).

10) 물론 이는 공론장을 다소 협소하게 정의한 결과이다. 뒤에 다시 나오지만, 합의 위주의 기존 공론장은 갈등적 성격을 지닌 정체성 정치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공론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 변경 역시 이를 반영한다; Habermas, 1992).

아니라 ‘생활 정치’ 등에서 보듯이 생산과 소비 사이의 역학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장, 곧 ‘시장’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하버마스에 가장 적대적인 비판자인 무페의 문제의식을 공론장의 틀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소화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Fraser, 1992; Karppinen, Moe & Svensson, 2008)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더구나 이 영역의 ‘개인’은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네트워크형’(이른바, ‘networked individualism’)으로 변모되면서 ‘사적 정치’가 가진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Friedland, Hove & Rojas, 2006).

셋째, 각 영역의 상호관계와 관련해 이 유형화는 하버마스의 비판적 지지자인 프레이저조차도(국가의 공식적 제도인) 의회나 정당이 가진 공론장적 성격 때문에 반대하고, 공론장과 국가가 맺는 권력의 순환관계(시민사회→공론장→정치권력)를 강조하는 후기의 하버마스¹¹⁾(Habermas, 1992, 2006)와도 어울리지 않게 국가와 공론장이 다소 경직되게 구분된다. 이 점은 개인(들)이 사적 영역에서 출발해 공론장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결정의 절차도 완성된다는 숙의민주주의의 문제의식도 희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호교차나 투입 자체를 보편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사적 영역의 정치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유형화가 요구된다.

이를 요약하면, 새로운 유형화는 앞서의 <표 1>의 영역에서 상호교차성과 정치성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영역을 바꿔 설정하는 것, 다시 말해 국가와 공론장을 긴밀히 연계시키고, 경제에서 소비의 효용을 중시하며, ‘사적·친밀의 영역’ 등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유형 사이를 나누는 도식화 또한 각 영역의 경계가 느슨하면서 영역의 교차가 보다 쉬운 형태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표 1>에서 사회 전체를 나누는 기준으로서의 ‘체계/생활세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공/사적’ 구분의 경우는 내부의 권력작용과 세분화를 염두에 두는 분명한 자기 정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감안해 이 글에서는 새로운 유형화의 기준으로 정치사회적 범주로서는 기존의 ‘공/사적’, 문화적·인식적 범주로서는 ‘이성적/감성적’의 이분화를 설정하고자 한다.

2) 새로운 유형화

서구 사회에서 공/사적의 구분은 근대에 들어 전형화된 것으로 탈근대로 일컬어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실 의미가 크게 희석되었다. ‘작업장과 가정’, ‘생산과 소비’, ‘남성과 여성’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는 이 이분적 사고는 단순 논리로 봐도 무리한 부분이 많다.¹²⁾ 특히 ‘사사회(privatized)된 수용자

11) 주지하는 바대로 공론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은 나중에 들어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를 잘 엿볼 수 있는 글은 1990년의 개정판에 붙인 서문이다(Habermas, 1990).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저서에 쏟아진 다양한 관심과 비판에 대응하면서 이에 일면 수긍하기도 하지만, 기존 공론장의 ‘자기 변형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등 당초 주장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엇보다 변화된 공중의 행동에 대한 나의 평가는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33쪽)고 하는데, 이 언명은 이후의 행보(Habermas, 1992, 2006)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미디어-공론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즉 그가 밝혔듯이 이 수정의 이유는, 과거 자신이 아도르노의 강한 영향 때문에 공중을 수동적으로 잘못 보았고, 당시 독일에서는 ‘교육혁명’이나 텔레비전이 보편화되지 않아 이의 영향을 과소평가했으며, ‘시민문화’ 같이 능동적 공중을 고려할 수 있는 작업개념을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이후의 하버마스는 공론장-미디어에 대한 평가를 크게 달리 하는데, 특히 포용을 강조해 미디어가 가진 통합성, 효율성, 대중성 등이 기존의 ‘비판적·합리적 토론’을 보완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는 여전히 상업성을 경계하고, 미디어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양가적이지만, 그의 관점이 변한 것은 분명하다(Hove, 2007). 이후의 연구자가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충분하다 하겠다.

12) 사상적 조류에 따른 이분화의 연원에 대해서는 웨인트롭(Weintraub, 1997), 이를 미디어(수용자)에 연계시킨 사고는

의 수동적 대중(화)와 ‘사적 개인(들)의 이성적·자발적 공중(화)’는 의도적으로 대조시킨 매우 수사적인 것이다(Ku, 2000, p. 222). 그러나 그렇다고 공/사가 같은 것은 아니며, 개념에 대한 자각과 이분화의 약점에 대한 경계만 늦추지 않는다면 분석적 범주로서 그 구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Weintraub, 1997). 이를테면, 시민이 직·간접적인 연대를 통해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통적(인식의)틀”(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 p. 7; 괄호: 인용자)을 마련하는 것은 콜드리 등이 생각하는 공적인 것의 핵심인데, 이 틀은 다른 이름으로는 온전히 포착되기 어려운 현상으로 보인다. 사적 영역의 정치가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공적인 것이 가지는 차별성과 중요성은 여전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공/사적의 구분에서는 양자를 나누는 자체보다 그 구분의 기준과 목적, 그 기준의 설정 주체가 가진 정치성, 구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이분법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페미니스트들도 이러한 생각에는 동의한다. 예컨대 필립스(Philips, 1997)는 문화와 경제, 인정과 재분배의 구분이 갖는 의미를 논하면서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스트의 금언을, “우리는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를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 사이에 ...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p. 149)라고 넓게 해석한다.

사적인 것은 전통적으로 공적인 것의 상대어이지만, 이 글의 유형화에서는 (특수한 정체성 내에 있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윤리적’ 의미를 가진다(이에 반대되는 ‘도덕적 측면’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것”이다; Baumeister, 2003, p. 745; 강조 인용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물론 기존 정치에서 ‘공통적 장’과 제도적 기반이 균열되면서 나타난 여러 변화들—정당 같은 전통적 제도의 쇠락, 정체성 정치 및 생활정치의 등장, 시민의 개인화·파편화 현상 등—을 적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정치는 기존의 정치와는 목적과 형태가 다르지만 나름의 정치성은 뚜렷한 ‘공적으로 지향된 사적인 것’(publicly oriented privateness)(Jones, 2007)이다.

이 글에서 공론장의 유형화를 위해 도입하는 또 다른 한 가지 기준은 문화적·인식적 범주로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구분이다. 이는 이론적 차원에서는 최근의 이른바 ‘감성으로의 전환’(affective turn)으로 부를 수 있는 정치·사회학의 감성에 대한 주목(Richards, 2004), 현상적 차원에서는 정치의 감성화로 볼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의 감성화, 또는 감성적 메시지의 정치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이 이분화 역시 앞에서 제시한 공/사적 구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공론장론의 주장자들은 ‘열정’ 같은 감성을 ‘자기 제어’를 저해하는 충동으로 보고, 이를 이성적 숙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앞서의 공/사적 구분과 맞물려 ‘공적 이성’과 ‘사적 감성’이라는 잘 알려진 이분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홀(Hall, 2005)에 따르면 이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부당하게 열정을 인간의 정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 외부적 힘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의 정신은 이성과 열정 모두로 이루어지며, 이성과 열정의 상호적 투입은 이성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Hoggett & Thompson, 2002). 다른 하나는 열정이 가치, 주장, 이데올로기 같은 정치적 요소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이성적인 것이며, 이성 또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열정을 포함한다는 점(폭력이나 적대감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또한 순수하게 감정적인 것만으로 되어있지 않다)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분화는 미디어 영역에서는 ‘뉴스·사실 프로그램’과 ‘비뉴스·픽션 프로그램’의 구분으로

나타난다. 이 구분은 특히 방송정책에서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 자칫하면 소홀해 지기 쉬운 (적어도 그럴 것으로 간주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정책은 논리적 이성과 진지한 공적 관심, 심층적·객관적인 정보, 명징한 언어 등을 강조하는 뉴스,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등의 사실·정치 분야는 권장하는 반면 이와 반대되는 감정, 감각, 즐거움, 몸, 시각적 이미지 등이 중요한 드라마, 게임쇼, 토크쇼 등의 픽션·재미 분야는 억압·방임하였다.¹³⁾

이러한 미디어관에서 정치는 결코 가볍고 재미있어서는 안된다. 자칫 정치의 논리성이나 진지성, 명증성 등이 재미의 논리에 의해 훼손된다면, ‘교양적 시민’을 만들어야 하는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 보도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의제를 단순화시키거나 시선을 끌기 위해 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것은 금기시 된다.¹⁴⁾ 흔히 ‘연성화’로 불리는 이러한 경향의 예로는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사적·개인적 소재의 부각(‘사소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각종 시각적 이미지의 남용(‘이미지화’, ‘스펙터클화’), 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인격화’) 등을 들 수 있다. 미디어의 상업화가 나름의 미덕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비판적 사고 일변도는 (공적·제도적)정치·이성·진지함·뉴스 등을 중시 하면서, 이들과 짝을 이루는 인간사의 나머지 반쪽인 재미·감성·가벼움·픽션 등은 무시하는 것이다. 또 규범(만)을 앞세워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대중의 실제적인 관행, 특히 현실에서 시민·공중을 형성시키는 주요한 한 요소인 집단 감성은 폄하하는 것이다. ‘공적 지식’과 ‘대중문화’의 이분적 경계선(O'Connor & Klaus, 2000)은 대중의 기호나 동향에 초점을 맞출 경우 큰 의미가 없다.

이 이분화에 대한 반비판 또한 무수히 많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성의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넓은 의미의) 뉴스 시청과 즐거움을 병행시키면서 선정주의적 편집경향을 중립적·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오락프로그램이 가진 나름의 정치성을 부각시킨다(전규찬, 2002). 감성적 영역 또한 기존의 (정치적) 공론장과 대립/보완의 관계에서 공론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은 이를 ‘문화적 공론장’(McGuigan, 2005; Hartley & Green, 2006), ‘감성적 공론장’(Lunt & Stenner, 2005), ‘미학적 공론장’(Jones, 2007) 등으로 명명한다. 또 시민권개념과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켜 ‘문화적 시민권’¹⁵⁾, ‘탈근대적 시민권’(Van Zoonen, 2005), ‘미디어 시민권’(Jones, 2006), 심지어는 ‘타블로이드 시민권’(Tulloch, 2007)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단적으로 말해 이들의 문제의식은 지금의 달라진 환경이

13) 이러한 이분화의 근저에는 ‘공통적’(common)인 것과 ‘저속한’(vulgar) 것을 동일시하는 엘리트주의적 (고급)문화관(Hebdige, 1996)이 깔려 있다. 방송과 쾌락을 구분하지 않는 청교도적 금욕주의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초기 방송(특히 공영방송)에 부과한 공적 목적은 방송에서도 고급문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달리 말해 방송에서도 문화적 교육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문화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의지, 또는 반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질이 낮아진다는 방송(나중의 텔레비전에는 시각적 이미지까지)에 대한 불신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파시즘이라는 역사적 상흔으로 인해 정치의 ‘미학화’를 극도로 경계했던 초기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 그리고 나중의 하버마스의 공론장론 등은 이러한 공영방송론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14) 뉴스에서 이른바 ‘대중적인 것’과 ‘높은 질’(quality) 사이의 전형적인 이분화는 해링턴(Harrington, 2008) 참조.

15) 문화적 시민권 개념은 쓰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 그 세부적 강조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억압이나 배제에 저항(Hartley, 1999)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포용(Stevenson, 2003)할 필요성보다는 대중문화가 가진, 우리를 함께 하게 만드는 민주적 잠재성에 주목하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문화적 시민권은 “우리가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읽고, 소비하며, 감탄하고, 비판하는 문화적 실천에 참여하는 데 함축된, (우리끼리의) 유대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유대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Hermes, 2005, p. 10; 괄호: 인용자)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¹⁶⁾

물론 이에 대한 전통적 공론장론 측의 반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비판의 기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적·제도적 공론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Blumler, 1999; Garnham, 2003). 이들의 일부는 전통적 공론장에 대한 비판에 어느 정도 수긍한다. 이를테면 달그렌(Dahlgren, 2009)은 최근의 저서에서 특히 상업적 미디어·장르 또는 감정이나 즐거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라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문제의식을 확대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이면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전의 (근대적) 문제의식이 놓여있다. 적극적 절충론자인 앞서의 달그렌(Dahlgren, 2009)은 공론장의 전제조건으로 ‘시민문화’를 설정하면서 그 첫 번째 구성요소로 예의 이성적 ‘지식’을 꼽는다. 이 지식을 이루는 원료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인데, 미디어의 수용자는 바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참여와 담론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상적 공동체’가 됨으로써 비로소 공중이 된다는 것이다. 공중은 정치적 담론의 형성이라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책임을 지며 결국은 ‘특수한 집단’이 되는 셈이다. 델리 카르피니(Delli Carpini, 2000) 역시 동일한 인구학적 집단 내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지식을 가진 시민을 셉슨(Schudson, 2000)이 주장한 (감시 기능에 머무르는) ‘좋은 시민’에 빗대 ‘더 좋은 시민’이라고 말한다. 콜드리 등(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은 이보다 더 적극적이는데, 그들이 보기에 공중은 단순한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넘어 ‘보편적 해결’을 도모하는 민주적 참여를 핵심적 요소로 가지며, 정보·지식의 ‘이해’는 공중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첫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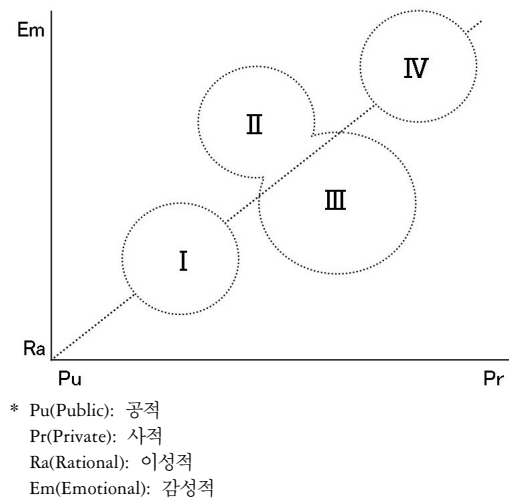
이렇듯 이성적/감정적 이분화 역시 앞에서 제시한 공/사적 구분과 마찬가지로 그 차이의 경계선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 쪽이 나머지 한 쪽을 대체하거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이분화들은 일정한 장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이분화의 오류를 잘 드러내게 하면서 이론이 변화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포착하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존 사고 나름의 가치·규범성이나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제도의 중요성을 아울러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이러한 이분화를 적용해 공론장론의 발전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앞서 설정한 대당관계는 같은 평면·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이는 질적 차이를 강조한 이전의 규범적 모델을 (어느 정도) 경험적인 모델로 전환시킨 것으로, 그 중간 유형인 II, III의 등장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즉 기존의 모델이 가진 이분화의 경계선이 약화됨으로써 II, III의 접이지가 가능해졌고 그럼으로써 위 그림과 같이 경계가 완화된 통합적 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여기에서 I 유형은 공적이면서 이성적인 ‘정치적 공론장’으로 규범적이며 이상적인 형태를 취한다.

16)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이 접이야말로 공론장 입장에서 재미·오락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확장시켜야 하는 이유이다(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 Dahlgren, 2009). ‘이성적 합의’가 아닌 ‘감성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제리 스프링거 쇼>에 런트와 스테너(Lunt & Stenner, 2005)가 부여한 (현실에 대한) ‘역설성’(paradoxicality)은 과거의 공론장과 다른 지금의 공론장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17) 콜드리 등(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 p. 30)이 ‘공중’(public)이 규범적인 ‘명사’가 아니고 여러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공중의 면모가 느슨해지면서 다양해졌다는 의미이다.

물론 현실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또 ‘사실에 반할’(counter-factual) 때에도 그 사실을 비판하는 의의를 가진다. II유형은 ‘공적·감성’의 조합으로 문화적 대중주의가 이에 가깝다. III유형은 정체성 정치, 미시 정치 등을 포괄하는 ‘차이·다원주의’이다. 이들 두 유형 사이는 짝으로 따라다니는 감성/정체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의 영역이 많이 중첩되지만(범주 표기도 유사하다), 감성을 앞세우는 ‘대중주의’와 차이가 중요한 ‘다원주의’의 개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적·감성’의 형태인 IV유형은 사적 친밀/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기존의 공론장론에서는 중시하지 않았으나 이 그림에서는 I, II, III과의 경계가 흐려진 만큼 타 영역으로의 전환이나 발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콜드리 등(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이 다소 목적의식적으로 말하는 ‘공적 연계’는 이 전환을 훨씬 손쉽게 하는 조건(특히, 미디어적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림 1> 공론장론의 유형화

(1) I 유형: 정치적 공론장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치적 지식과 교양적 시민, 이상적 대화상황과 진지한 토의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공론장 개념은 이성과 지식 중심의 시각 때문에 옹호 못지않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현실의 변화와 관련해 하버마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Habermas, 1990 서문). 비판은 주로 공론장과 이를 구현한 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가 가진 ‘배제’의 가능성에 집중되었다. 즉 하버마스가 강조한 이성-지식-예의-대화-합의의 공론장은 그에 맞는 ‘자격’을 요구하고 그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의 표출이나 개인적 의제의 제기, 합의의 거부 등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 현실적 결과는 시민권이 기초가 되는 제도적 정치의 공론장을 중심으로 계급-인종-민족-성-교육-연령 등의 각종 사회적 기준에서 ‘부르주아-백인-앵글로색슨-남성-교육받은 층-중장년 이상’만이 권리를 누리며, 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층들은 주변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나쁜 공중’(Comer, 2009)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존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의사결정 관행과도 큰 차이가 없다(Dryzek, 2000).

이에 대해 공론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이 계급(피지배)과 성(여성)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공론장을 구성하는 단위를 집단으로도 확대하고 배제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이는 개념의 추상수준을 규범에서 현실로 대폭 낮춘 것이다. 이로써 공론장은 ‘단일 공중’에서 ‘공중들’로 복수화되었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층으로도 확대되었다(피지배-대안; subaltern-counter). 물론 이는 하버마스 자신의 ‘보편적 화용론’(formal pragmatics)으로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과정이었지만, 나중에 하버마스가 다시 돌아와 처음 입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은 지금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공론장의 ‘공적인 것’이 “개인과 집단 사이를 매개하는 미디어테크놀로지에 의해 수용자가 구성·유지·표현됨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효과”(Simons, 2002, p. 170)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맞물려 미디어의 규범을 새로이 재확립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공론장론을 통해 미디어는 이전의 막연한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교양적 시민’을 양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집적·표현하는 보다 구체적인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현실에서 공론장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 공영방송은 이 임무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됨으로써 정치적 조건의 변화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야기된 1980년대의 정치적·경제적 곤경(특히, 영국 대처정부의 BBC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여전히 적대, 특히 정체성 정치에 기반해 이른바 ‘차이 민주주의론자’(difference democrats)이 제기한 공영방송의 공동체주의적 색채에 대한 비판은 공영방송의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에 비추어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비판은, Jacka, 2003; 과거·현재는, Creeber, 2004). 이에 대해 공영론자들은 정체성 정치가 가진 약점, 즉 민주적 공론장의 근본적인 전제인 “입장과 관점, 그리고 가치가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곧 다원적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차시키는 네트워크에 노출될 가능성”(Gurevitch, Coleman & Blumler, 2009, p. 177)이 매우 낮은 파편화의 우려를 지적한다. 한 편은 동질화, 상대방은 파편화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 쟁점은 하버마스의 변화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중의 하버마스(Habermas, 1992)는 초기와 달리 기존 체제의 불안정성(또는, 변화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프레이저를 따라 민주적 숙의에 두 가지 과정을 설정한다. 하나는 의회나 법원 등의 공식적 의사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같이 제도화된 ‘강한 공론장’이다. 다른 하나는 ‘약한 공론장’으로 각종 아이디어나 정보가 순환되고 정치적 의지나 의견이 형성되는 비공식적인 곳이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이 둘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성공적인 매개에 달려 있다고 다소 기능주의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공론장의 구성은 지금까지 기존의 공론장을 비판했던 많은 이들이 제시한 바 있는 ‘다양한 공론장들’에 다름 아니다.¹⁸⁾ 그렇다면 이제 공론장론은 공론장의 외연을 넓히고, 공론장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그 유효성을 잃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 변모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은, Sinekopova, 2006 참조). 이 점은 당대의 맑스즘에 맞서 (대의제)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언론이 단순히 지배의 수단이며 인간의 이성 또한 ‘소외의 함정’(alienating trap)만이 아니라고 주장한 공론장론의 당초 문제의식(Garnham, 2009)이 더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숙의나 합의 등의 요소를 ‘메타화’시키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달그렌은 정치와 대중문화

18) 물론 이러한 서술에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하버마스가 ‘철학적 다원주의’를 수용했다기보다는 ‘다원주의의 현실’과 타협했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가치(특히 집단적) 사이의 부조화와 공약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불가능한 합의보다 절충과 협상을 권장한다. 이는 결국 정의는 시대나 사회를 초월해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당시의 이념과 가치 사이의 ‘투쟁’(strife)이라고 하는 셈이다(Baumeister, 2003).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를 주장하는 반주넨(Van Zoonen, 2005)을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공론장과는 다른 대중문화의 표현방식을 ‘메타 숙의’(metadeliberation)로 부르며, 이를 공론장적 인식의 확장으로 해석한다. 또 산만하고 두서없으며 끝도 없는 대화를 다른 의견이나 문화를 만나는 ‘꾸준하고 활발한 상호작용’, 곧 ‘시민 대화’로 여기는 사고 역시 같은 맥락의 것이다(Bohman, 1996, p. 145). ‘가치’, ‘신념’, ‘선호’ 등의 분석적 범주를 이용해 합의의 수준을 다층화한 것(‘메타 합의’)은 합의에 대해 유난히 비판적인 급진적 다원주의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유용하다(Dryzek & Niemeyer, 2006).

이러한 문제의식은 달그렌이 제기한 ‘시민문화’로 좀 더 구체화된다. 달그렌에 따르면, 시민문화는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적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 사회-문화적 세계의 특징”(Dahlgren, 2009, pp. 104-5)이다. 달그렌은 시민문화가 지식-가치-신뢰-공간-실천-정체성들이 서로 엮여진 회로의 산물로 파악한다.¹⁹⁾ 이러한 시민문화는 뒤에 나오는 ‘사적·이성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포괄한 것으로 공론장 정치의 달라진 모습이기도 하지만 역시 무게 중심은 앞의 지식, 즉 이성의 영역에 두어져 있다.²⁰⁾

그러나 대부분의 비판자들이 입을 모으는 공론장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론적’일 수밖에 없는 그 장에서 불가피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불평등(권력)관계,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절차적 공정성의 보장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 점은 공론장이 ‘비이성’과 ‘불평등’ 사이에서 어느 것에 더 적대적인지, 그리고 ‘절차’와 ‘저항’ 중 어느 것을 더 선택하는지²¹⁾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디어분야에서 하버마스의 충실한 옹호자 중 한 사람인 달버그(Dahlberg, 2005)는 강제가 없는 자유로운 공론장이라는 이상이 반드시 권력의 작용을 고려치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상화’(normalization)를 시도하는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공론장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성에 더해진 ‘비판적 기준’은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찮다. 앞서 시민문화를 언급한 달그렌(Dahlgren, 2006)조차 갈등이 실제적인 적대의 성격을 지닐 때 커뮤니케이션·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는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론장에서의 동등한 참여는 공론장의 산물이 아닌 전제라고 하면서 이는 가정되기 보다는 쟁취되어야 한다는 콘(Kohn, 2000)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참여에 자격이 요구되지 않고, 수사학적 테크닉 또한 동등하게 하며, 합의가 강제되지 않으면서도 그 결정이나 논의가 일정한 힘을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의 장, 곧 공론장들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19) 처음(Dahlgren, 2003)에는 가치, 친근성, 지식, 실천, 정체성(들), 토론 등으로 제시했으나 이후에 친근성과 토론이 신뢰와 공간으로 바뀌었고, 중요도와 관련 있어 보이는 순서 또한 달라졌다. 친근성이 신뢰로 바뀐 것은 민주주의적 공론장에서 매우 중요한 낮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인 ‘얇은 신뢰’(thin trust)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토론의 공간 대체는 토론 자체보다 토론이 벌어지는 공간(미디어 소비)을 중시한 것이다(이에 대한 부분적 비판은, Couldry, 2006 참조).

20) 달그렌(Dahlgren, 2009)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 글 전체에서 인용되는 연구자 중 가장 적극적인 절충주의자로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는 현대사회의 가장 민감한 갈등요인인 “보편주의적 포용과 차이의 인정 원리 사이의 긴장”에 대해, 이는 선형적 논리 차원에서가 아닌 구체적(정치)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의 전횡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 문제들—이를테면, 무관심이나 분리주의, 배제 등—을 고려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pp. 64-5). 또 시민들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그는 ‘대화는 결코 민주주의의 정신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 그것이 “사교적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이 결코 민주주의의 정치적 생활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p. 89)고 하면서 그것에 ‘잠재성’을 부여하는 한편, 대화가 시민적 논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대화가 아닌 어떤 대화만이 숙의에 어울린다는 것이다.

21) 이를테면, 딘(Dean, 2001)은 하버마스가 혁명적 에너지를 민주적 절차로 대체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다양한 공중들’의 구성원들이 문화적 차이의 경계선들을 가로질러 서로 말을 건넌 수 있는 특별하면서 더 포괄적인 장”(Fraser, 1992, p. 126)이 사회적·국가적 수준에서 힘을 가져야할 필요성²²⁾이 있다는 주장은 양 편의 접점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II유형: 대중주의

이 유형은 ‘공적-감성’의 조합으로 미디어라는 현대적 공론장이 가진 복합성과 감성적 재미의 성격을 돌이켜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재미-대중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대중주의’²³⁾는 “신에 대한 경외, 군주에 대한 복종, 귀족제와 군대 및 전문직에 대한 존경, 나이가 가지는 지혜에 대한 인정 등”과 반대되는 개념, “보통 사람의 상징적 경험 및 실천이 분석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문자 C를 가진 문화’(Culture)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적 가정”(McGuigan, 1992, p. 4)으로서 20세기를 특징짓는 큰 흐름 중의 하나였다(Curran, 2002). 그러나 대중주의는 아도르노 등의 ‘문화산업론’의 유산에 의해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와 동일시되면서 늘 폄하되기 일췌였다.

공론장론 역시 당초에는 이러한 대중주의 흐름에 대한 비판의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지적인 내태나 쾌락주의(hedonism)마저 낳는다는 것이다(반대도 성립한다, 중요하고 진지한 것은 재미를 일으키지 않는다). 정작 하버마스 자신은 공론장론의 처음부터 정치적 공론장과 성격이 다른 ‘문학적 공론장’(literary public sphere)도 제기했지만, ‘이성적-비판적 숙의’에 대비되는 ‘미학적-정서적 양식’은 대중 선동적 이유를 들어 늘 경계했으며, 실제 연극이나 궁정 양식, 의식, 시각적 영상,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수사법 등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Peters, 1993). 이 점은, “합리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지평이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이나 이상적 대화상황의 개념적 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구의 비판이론을 갖는 셈이다”는 달그렌(Dahlgren, 1995, p. 109)의 지적처럼 공론장론의 의의를 떨어뜨리는 큰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론장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그 문제의식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같은 문화 영역 안에서도 주로 대중주의 쪽에 의해 경주되어온 점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이는 참여와 절차를 강조하는 공론장론이 역설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나 ‘가치 있는 생활’로부터 대중(그리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미디어)을 배제·소외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맥키(McKee, 2005)는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이유들인 ‘사소화’, ‘상업화’, ‘스펙터클’, ‘과편화’, ‘무관심’(apathy) 등이 사실은 여성·노동계급·흑인·퀴어·청년 등과 같은 주변층의 소외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노동계급은 전통적으로 자발성, 예의 없음, 속물성, 상호성 등의 특징을 가졌고, 절제나 합리성, 조용한 감상, 관조 등으로 이루어진 지식층의 가치와는 당초부터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p. 88). 그러나 그러한 대중문화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보통 사람에게 소속감을 주고, 참여를 도우며, 우리가 사회에 바라는 바를 실현시키는 매력을 지니고, 공·사적 영역을 연결시키며 그 경계를 없애 더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든다(Hermes, 2006).

22) 이는 특히 칼훈(Calhoun, 1993)이 강조했던 것으로 만약 이렇게 공론장(시민사회)에 기존의 제도나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중요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23)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은 무비판적 대중주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됨으로 맥기건(McGuigan, 1992)은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한다.

대중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이미지화, 스펙터클화 역시 파시즘을 연상시키는 정치의 미학화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시몬스(Simons, 2008)는 모든 형태의 정치가 미학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미학화된 정치는 파시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나 급진적 민주주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미학화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미학화되어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미학화에 대한 막연한 거부는 특히 대부분의 정보·문화가 이미지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매개’, ‘미디어’ 등을 필요 이상으로 불신하게 만든다.

이 점은 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곧 대중문화와 그 소비의 정치성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데, 그 단적인 예는 대중뉴스 곧 타블로이드에 대한 재평가에서 발견된다. 주지하다시피 타블로이드는 고급지에 대조되는 전형적인 대중지이며 중요하고 공격적인 정보보다는 유명인 중심의 일회성 가십정보를 나열하는 저급한 신문이다(Sparks, 2000). 텔레비전에서 타블로이드화는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채널들이 자신의 시장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재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설정한 ‘적은 비용-적은 수익’의 전략을 가져온다. 초기의 공론장론에 따를 때, 이러한 타블로이드는 ‘진정한’ 공론장을 해치는 반(反)공론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재평가에 따르면, 타블로이드는 상당한 정치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노동계급이 대부분인 타블로이드의 독자들도 타블로이드의 단점을 잘 알고 있고, 때로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 이를 소비한다(Wahl-Jorgensen, 2008). 맹목적 소비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타블로이드의 독자들을 아마도 ‘교양적 시민’으로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비정치적 시민’인 것은 결코 아니다.²⁴⁾ 여기에 지금 시점에서 보편화된 대부분의 저널리즘 편집관행들이 당대에는 질 낮은 타블로이드 수범으로 비판 받았다는 점(Örnebring & Jönsson, 2004), 선정주의에 대한 평가도 대중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그렇게 타기할 일이 아니라는 점(Harrington, 2008)까지 감안한다면 타블로이드에 대한 재평가가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토크쇼나 리얼리티쇼, 쇼오페라 같은 전통적인 텔레비전의 대중장르들 역시 이와 비슷한 측면을 공유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통념에 반대하는 이러한 파격적 주장이 그 독자들조차 알고 있는 단점의 벽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적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해왔다는 점은 충분히 재평가될 가치가 있어 보인다. 특히 시민을 정치게임을 구경하는 관객으로 치부하면서 참여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뉴스 프로그램의 반시민성(Lewis, Inthorn & Wahl-Jorgensen, 2005)은 ‘뉴스≠진지함=시민’, ‘픽션≠재미≠소비자’라는 전통적 등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재미를 지향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같은 정치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쾌락주의는 대중주의의 불가피한 요소이다), 또 이런 프로그램만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전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다만 재미 프로그램의 정치성은 선형적으로 단정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대중에 어울리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양식의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24) 이를 앞서 언급한 섯슨(Schudson, 1998)의 ‘감시적 시민’쯤으로는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성은 의제의 편파성, 이미지나 수사의 과다한 사용, 감정적 수용 등과 깊게 결합되어 있어 감시적 시민에게도 때로는 필요한 심층성이나 명증성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이 점에서 공격적인 망과 ‘연결’되어 있느냐(mediated public connection), 그렇지 않느냐는 여전히 중요하다(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

(3) III유형: 차이·다원주의

이 유형은 ‘사적·이성’의 조합으로, 공적 영역에 치우친 이전 정치는 주목하지 않았던 사적 영역을 비롯해 다양한 차이와 적대가 가진 중요성을 환기시켜 정치의 영역과 범위를 넓히는 의의를 가진다. 최근 등장한 정체성의 정치나 생활 정치, 미시 정치 등은 정치가 가진 기존의 공간은 물론 제기하는 문제의 성격 또한 바꾸었다. 이로써 정부나 의회 같은 제도적 정치공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가족(정)이나 (소)공동체, 학교, 시장 등의 비중이 크게 커졌다. 이는 기존 정치의 주요 변수인 계급이나 인권, 분배 등이 악화되고 상대적으로 성이나 환경, 종족, 문화, 생활스타일 등의 미시적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정치가 중심인 기존의 공론장이 복수화된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시민사회의 여러 (사적)영역으로 다양화된 정치성을 소화하기 위해서이다(Habermas, 1992). 그 결과, 공론장의 의의는 하나의 공론장에서의 토론·합의가 아닌 다양화된 공론장들 사이의 중재와 커뮤니케이션(특히 제도적인 것과 비제도적인 것 사이)에 두어지게 되었다. 이 점은 공동선을 강조하는 이전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와 시민이 바탕이 되는 ‘합의의 정치’의 유효성이 사라지고, 급진적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차이(들)의 정치’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차이·다원주의는 어떻게든 결정 또는 합의가 불가피한 현대의 민주적 정체의 존재양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차이에 처해 ‘직접적 행동’²⁵⁾을 강조하는 이들의 처방이 ‘낮선 사람들 사이의 연대’라는 문제를 ‘대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버마스보다 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다(Garnham, 2009). 게다가 차이의 강조, 다른 말로 합의의 거부와 다양성의 제고는 이면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전횡이라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Garnham, 2003). 정치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탈정치를 불러 “(사적·경제적인 것을 포함해) 그 어느 제도도 민주화는 단연 정치적인 성격의 일이다”(Karppinen, 2007, p. 503; 괄호: 인용자)라는 본연의 ‘철저한 민주화’ 입장보다는 단순히 ‘차이를 위한 차이’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차이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권력(의 불평등) 관계’이고(Fraser; Karppinen, 2007, p. 503에서 재인용),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슬로건도 그 역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Verstraeten, 2004).²⁶⁾

차이·다원주의의 문제 제기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서, 대표적인 예로 자카(Jacka, 2003)는 공영방송에 내재된 공동체주의적(단일의)공공선과 위계적 규범이 가진 문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과거 독점시절의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 같은 경쟁시대에 처해 달라진 공영방송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의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본질주의적 측면을 비판하면서 다른 규범적 모델(무폐의 급진적 다원주의)을 동원했다는 점은 적절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Karppinen, Moe & Svensson, 2008). 대안으로 제시하는 ‘스스로 만드는 시민권’의 비정치화된 민주화도 개인·소비 차원의 것이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물론,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언급이 없다). 다양성의 과도한 강조

25) 물론 여기서의 직접적 행동은 숙의를 넘어서는 실천을 의미한다. 이들은 마치 하버마스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이 실제의 ‘적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다(Dahlgren, 2006).

26) 이렇게 비판을 받는 차이·다원주의자의 일 분파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호적·문화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 하며, 시민권 역시 “더 이상 단순히 국가와 신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의 산물이 아니고, 전혀 내려오는 공동체의 유산에 문화적으로 순응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스스로 만드는 시민권(do it yourself)이야말로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다 ... 이는 시민권의 기초로서 자기 결정을 강조하는 것이다”(Hartley, 1999, p. 178)라고까지 말한다.

역시 수용자의 파편화 현상과 합쳐져 오히려 소수 문화의 사회적 격리를 몰고 올 수도 있다.²⁷⁾

이에 대해 본(Born, 2006)은 공영방송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다른 미시적 공론장들의 통합적 장으로 삼는 ‘공영방송+미시적 공론장들’의 ‘이중 모델’을 제시한다. 소수자의 의사 표현 못지않게 소수자와 다른 소수자,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적대적 차이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일정 수준의 합의와 연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Karppinen, Moe & Svensson, 2008). 만약 그렇다면, 차이·다원주의나 페미니즘의 주장은 하버마스나 정치경제학이 주장하는 (미디어)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피할 이유가 없다(Garnham, 2009). 이는 결국 앞서의 I 유형의 정치적 공론장과 이 유형의 갈등 가능성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4) IV유형: 사적 친밀/프라이버시

‘사적-감성’이 조합된 IV유형의 사적 친밀/프라이버시는 I 유형의 집합주의(collectivism) 및 공회주의적 사고와 대조/보완되는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먼저 이 영역을 과연 공론장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통적 공론장은 공동·연계·토론·직접 행동 등을 중심 요소로 하는 사회적·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원초적 집단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영역이 이러한 공론장과 어울리지 않을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영역이 공론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공론장의 시대적 배경을 이루는 ‘근대’가 바로 이 영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사적·자율적 개인은 각종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봉건시대와 근대를 구별케 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사적 개인이 만드는 공적 영역’이라는 하버마스의 공론장론이 근대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²⁸⁾ 그러므로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이 영역은 공론장 또는 공적 정치 이전의 장, 곧 ‘최초’(proto)의 ‘잠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²⁹⁾ 그런 의미에서 이 영역을 ‘원초적 공론장’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 개인은 양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기초로 가족·친구 사이의 친밀한 사적·정치적 대화,³⁰⁾ 그리고 생활의 필요를 위한 시장행위(미디어소비)를 통해 앞서 본 ‘공론장에의 참여’, ‘대중주의의 추구’, ‘정체성의 주장’ 등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런 의미를 최소한으로만 가지는 순수한 개인적 만족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이 I 유형의 공론장에서 나왔던 시민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27) 물론 이에 대한 재반박도 들어볼만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낳은 파편화 문제에 대해 달버그(Dahlberg, 2007)는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해결책-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중간 지대적 협상’을 하는 것-이 합의에 기초한 구성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달버그는 이 모델이 대립하는 양자의 권력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의미와 합리성의 간주관적 토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며(이들은 통합된 초월적 주체를 상정한다), 차이가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근본적인 위치를 이론화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 내부의 숙의와 그러한 입장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같은 논지는, 이항우, 2005 참조).

28) 물론 개인 자체는 하버마스의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하버마스가 ‘무의식’을 싫어했다는 점은 그 한 예가 된다(Dahlberg, 2005).

29) 물론 이에 대한 바흐젠 등의 비판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입론이다. 바흐젠은 이 일상의 영역이 수많은 모순과 이질성, 다양한 연계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치 공론장 개념에서와 같은 합리화가 지배하는 하버마스적 ‘생활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Gardiner, 2004).

30) 대화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주환(2005),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토론적 대화의 한계에 대해서는 머츠(Mutz, 2006)를 참조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공공선을 위해 집합적·정치적 행위를 하는 시민이면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노동을 하고 시장에서 소비할 물품을 사는 사적 개인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분석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같은 사고와 행위의 틀 속에서 존재하는 ‘한 몸체의 두 머리’이다. 셋슨(Schudson, 2006, p. 108)의 말을 빌리면, 둘 사이의 관계 자체가 우리의 시민생활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사회관에서 ‘개인-욕구-시장-이기적·수동적 소비자’는 ‘사회-책임-공론장-도덕적·적극적 시민’과 늘 대조되어 왔으며, I 유형의 이름인 ‘시민’과 IV유형을 대표하는 ‘소비자’는 미디어를 비롯한 각종 정책 대립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Livingstone & Lunt, 2007).

만약 개인과 소비를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와 행위로 본다면 사실 지금의 다수적 문화소비의 한 ‘해석’에 가까운 II유형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성의 기반이 사실상 소규모 시장(‘diaspora’를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는)인 III유형, 심지어 단순 소비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I 유형조차도 미디어영역에서는 뉴스·다큐멘터리의 시청(소비)행위로 시작되므로, 소비의 한 부분집합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IV유형의 만족이 지배적인 틀에 가두어져 개인 차원에만 머물 경우, 사회에 필요한 다른 공론장들이 어떻게 진작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더 크게 말해, 정치 담론에서 지식·진정성이나 연대, 다양성·저항성 같은 다른 유형의 덕목을 소비의 그것(선택·만족)과 어떻게 양·질적으로 양립·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다.

대안의 하나는 개인·소비자들이 연대해 집단적 운동을 펼치면서 미디어를 포함해 사회적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시대적 전환점이 된 많은 시민운동들이 처음에는 개개인의 소비 불만족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이의 실효성을 보여준다(Jubas, 2007). 지금도 다양한 소비자운동-환경운동, ‘정당한 교역’ 운동, ‘슬로우 푸드’ 운동 등-이 매우 정치성이 높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많은 공론장들이 이런 시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³¹⁾ 이로써 소비자나 시민이 개별체가 아닌 ‘소비자+시민’의 혼성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³²⁾(Lamla, 2008).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도 소비 자체가 반드시 생산의 부수적 단위인 것은 아니며,³³⁾ 모든 가치를 경제적 효용으로 가늠하려는 신자유주의는 바로 그 혜택의 수혜자로 간주되는 소비자의 불만족운동에 의해 가장 쉽게 균열된다. 소비자주권론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슬로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소비자의 행위는 IV유형에서 출발했지만, I 유형이나 III유형의 것이 된다. 만약 이러한 전환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앞서의 유형 구분은 더 많은 상호교차를 전제하게 되고, ‘소비자-시민’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주의나 소비자주권론이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소비가 생산에 필적하는 권력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른바 ‘생산-소비자’(prosumer)를 만든다는 디지털사회에서도

31) 콜드리 등(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에 따르면, 소비주의와 공적 참여 사이의 바로 이 연계야말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위기도 이 단계의 단절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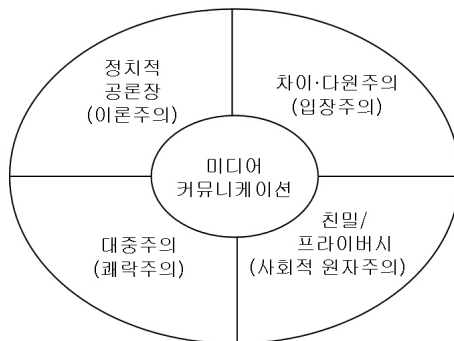
32) 물론 여기에도 구분은 있을 수 있다. 코헨(Cohen; Scammell, 2003, p. 125에서 재인용)은 시민공화주의적 이상에 좀 더 가까운 ‘시민-소비자’와 자유시장의 철학에 젖은 ‘고객-소비자’를 나누고 2차 대전 이후 서구사회에서는 고객-소비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이 차이는 사실상 ‘시민’과 ‘소비자’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 운동)가 가진 나름의 적극성(또 디지털시대에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33) 홀(Hall, 1973/2003)이 읽어낸 맑스의 <1857년 서문>을 참조할 수 있다.

결코 자명하지 않다(김예란, 2007). 소비에서 발생하는 불만 또한 매양 집합적 운동으로 커지지 않으며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만다. 또 소비의 도구적 이성과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이성은 하버마스의 ‘체계-생활세계’의 구분만큼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 설사 소비가 운동의 단위로 비화된다 해도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불식시키는 시민적 공공선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교육을 비롯한 일정 수준의 상향적 절차가 필요하다. 시장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창조성을 높이는 ‘차이의 소비’ 역시 자본전략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적어도 그와 구분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Gunster, 2004; Livingstone, 2005b). 물론 소비자운동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소비-만족이 정치적으로 전혀 의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파급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3. 논의 및 결론

공론장론은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그 문제의식이 수정·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공론장은 매우 신축적이면서 복합적인 개념이 되었다. 우선 ‘대안’(counter/subaltern)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복수(s’)가 되었고, 그로 인해 ‘공론’보다는 ‘장’의 의미가 더 커지게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공’의 구분이 약해져 ‘사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게 되었고, ‘론’도 보다 폭넓게 대화의 여러 기술적 차원까지 감안해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가 되었다. 이런 움직임이 초기 하버마스의 규범적 문제의식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는 물론 의문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단순히 인식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점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엇이 공론장이냐, 또는 ‘공론장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달리 말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영역의 어떤 대화든 일정한 공론장적 잠재성을 갖고 있고, 반대로는 전형적인 공론장이라 하더라도 그에 어울리는 행위 유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다양한 공론장들의 이중성

이 글에서 제시한 유형(들) 역시 이 처럼 가능성과 위험성이 교차하는데, <그림 2>는 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I 유형의 정치적 공론장은 초기의 이상적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그 내부에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있는 ‘이론주의’(theoretism)³⁴⁾라는 위험이 내재된다. 이 유형의 공론장은 자칫 이론주의에 치우쳐 허울에 머무르거나 배제를 일삼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다른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 의도치 않게 소수자의 사회적 격리나 게토화(ghettoization)를 몰고 올 수 있는 차이·다원주의의 ‘입장주의’(perspectivism)(합의가 불가능하다), 정치적 ‘기의’가 사실상 없는 대중주의의 ‘쾌락주의’, 개인을 고립시키는 친밀·프라이버시의 ‘사회적 원자주의’(social atomism) 등이다. 이처럼 각 공론장들은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위험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이 그림의 중앙에는 이러한 공론장을 조율·결정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놓여 있다. 허버마스는 최근 공론장을 다소 기능주의적으로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속의와 비공식적인 면대면의 속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재하는 체제(Habermas, 2006)로 정의하면서 그 핵심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론장들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가능성과 위험성을 오가는 복합적인 면모를 띠 수 있다.

이러한 공론장들의 복합성은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다양성으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고급문화(사실은, 정치성)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늘 논의가 질과 규제 위주에 머물렀던 방송의 오락프로그램이 가지는 정치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지금 같은 탈근대의 시대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이 감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런 정치성은 기존의 공론장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디어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측면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강조해왔던 정책적 측면 역시 논리적으로는 약화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한편으로는 정당이나 미디어 같은 강한 공론장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한 공론장들의 대표 격인(가족·친구 사이의) 대화이다. 사실 공론장들이 분화·다양화되는 과정은 일정량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론장들’을 아우르는 ‘중심적’ 공론장의 필요성을 더 커지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통적 공론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시킨 ‘메타’의 개념은 이 중심적 공론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유일한 공론장’은 아니(어야 하)면서, 포용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고, 의사결정권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실효성 또한 큰 공론장은 ‘공론장들’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오히려 그런 공론장의 존재를 위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은 공론장들을 포용하는 하나의 메타 공론장(본의 이중모델)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 비교연구에서도 밝혀진 바대로 공영방송을 가진 나라의 시청자는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시사 지식이 훨씬 높았지만, 그것이 일부러 그 공영 채널을 찾은 것은 아닌(inadvertent) 일종의 편승의 시청행태에 따른 것임은 십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Curran et al, 2009). 이는 공영방송에 다양한 수단의 합목적적 정책행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장 일상에 가까운 사적 친밀의 영역은 이를 추구하는 시민-소비자가 이 유형에만 머무르지

34) 이는 칸트에 대해 마흐젠이 비판한 말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추상적 체계를 통해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질서 없는 실제의 사회적 행위에 접근하는 태도를 말한다(Gardiner, 2004). 허버마스는 부르주아 외의 공론장들 또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칸트적 태도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Fraser, 1992, p. 138 참조). 이렇게 볼 때, 허버마스의 내부적 문제점은 흔히 비판받는 ‘배제주의’(exclusivism; 주변부·피지배의 배제)나 ‘중심주의’(centrism; 유럽·부르주아·이성·남성·엘리트·커뮤니케이션중심주의), ‘단일주의’(unitarism; common good의 강조, 전체주의적 성격)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론주의이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이론을 위해 경험적 현실성을 사상시키거나 선별된 현실의 어느 일부분을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비판 일변도 인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만족의 차원은 (시장)방임 그대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정책적 수단이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재미있으면서 정치적인’ II유형이 대중적으로 공유되는 현상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공영방송 같이 시장에 얽매어 있지 않는 미디어조차도 유력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 점과 관련해 적시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공영방송은 결코 시장의 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다양성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의의가 큰 공론장은 지금 사회의 다양한 균열이 만들어내는 소수자들의 공간인 III유형이다. 이 유형은, 성격 측면에서 보편적인 것을 추구해 다소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전통적 공론장과 같을 가능성이 있고, 대중성 또한 높지 않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 미디어에서는 외면당하기 쉽다. 그런 면에서 이 유형은 인터넷에 잘 어울린다. 그러나 동질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미디어에 목소리가 국한될 경우 격리주의나 파편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역시 일부라도 다수미디어를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공영방송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공론장들의 연계를 높이는 유력한 정책이다.

최근 하버마스는 현대의 권력을 네 가지로 나누면서 네 번째로 ‘미디어권력’을 꼽았다. 그리고 이 권력이 공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하나는 미디어의 자기 규제를 통한 독립성의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자(시민)의 성찰적 능력이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한 달성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보기에 따라서는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러한 요건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넓게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폭넓은 미디어 전체에 대한 ‘설계’가, 좁게는 새로운 대중적 정치커뮤니케이션양식이 절실함을 일깨워준다.

■ 참고문헌

- 김예란 (2007). 디지털사회, 소통의 문화. 『언론과사회』, 15-3호, 39~70.
- 김주환 (2005).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 『언론과사회』, 13-1호, 75~99.
- 유주현 (2007). 공론장이론의 문제들. 『철학연구』, 79호, 275~299.
- 이항우 (2005). 경합적 다원주의와 온라인 사회·정치토론. 『경제와사회』, 통권 68호, 75~99.
- 전규찬 (2002). 텔레비전 오락에 관한 ‘새로운’ 담화정치학 연구. 『한국방송학보』, 16-2호, 304~335.
- Baumeister, A. T. (2003). Habermas: Discourse and cultural diversity. *Political Studies*, 51, 740~758.
- Bennett, L. (1998). The uncivic culture: Communication, identity, and the rise of lifestyle politic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698, 213~232.
- Bernstein, M. (2005). Identity politic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1, 47~74.
- Blumler, J. (1999). Political communication systems all change: A response to Kees Brant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4(2), 241~249.
- Bohman, J. (1996). *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 Born, G. (2006). Digitising democracy. *Political Quarterly*, 76(s1), 102~123.
- Calhoun, C. (1993).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 *Public Culture*, 5(2), 267~280.
- Cohen, L. (2001). Citizen consumer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entury of mass consumption. In M. Daunton & M. Hilton(Eds.), *The politics of consumption* (pp. 203~222). Oxford: Berg.
- Corner, J. (2009). Public knowledge and popular culture: spaces and tensions. *Media, Culture & Society*, 31(1), 141~149.

- Couldry, N. (2006). Culture and citizenship: The missing link?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9(3), 321~339.
- Couldry, N., Livingstone, S., & Markham, T. (2007). *Media consumption and public engagement*. London: Palgrave.
- Creeber, G. (2004). "Hideously white": British television, globalization, and national identity. *Television & New Media*, 5(1), 27~39.
- Curran, J. (2002). Media and power. 김예란 · 정준희 역 (2005). 『미디어파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Curran, J., Iyengar, S., Lund, A., & Salovaara-Moring, I. (2009). Media system, public knowledge and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4(1), 5~26.
- Dahlberg, L. (2005). The Habermasian public sphere: Taking difference seriously? *Theory & Society*, 34, 111~136.
- Dahlberg, L. (2007). Rethinking the fragmentation of the cyberpublic: From consensus to contestation. *New Media & Society*, 9(5), 827~847.
- Dahlgren, P. (1995). *Television and public sphere*. London: Sage.
- Dahlgren, P. (2003). Reconfiguring civic culture in the new media milieu. In J. Corner & D. Pels(Eds.), *Media and restyling of politics*(pp. 151~170). London: Sage.
- Dahlgren, P. (2006). Doing citizenship: The cultural origins of civic agency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9(3), 267~286.
- Dahlgren, P. (2009). *Media and political engagement: Citizens, communication, and democracy*. NY: Cambridge Univ. Press.
- Dean, J. (2001). Cybersalons and civil society: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in transnational technoculture. *Public Culture*, 13(2), 243~265.
- Delli Carpini, M. (2000). In search of the informed citizen: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The Communication Review*, 4(1), 129~164.
- Dryzek, J.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Oxford Univ. Press.
- Dryzek, J. S., Niemeyer, S. (2006). Reconciling pluralism and consensus as political idea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634~649.
- Fraser, N. (1992).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In C. Calhoun(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pp. 108~42). Cambridge, MA: MIT Press.
- Fraser, N. (1997). *Justice interrupt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 London: Routledge.
- Friedland, L., Hove, T., & Rojas, H. (2006). The networked public sphere. *Journal of the Public*, 13(4), 5~26.
- Gardiner, M. (2004). Wild publics and grotesque symposiums: Habermas and Bakhtin on dialogue, everyday life and the public sphere. In N. Crossley & J. M. Roberts(Eds.), *After Habermas: New perspectives on the public sphere*(pp. 28~48). Oxford: Blackwell.
- Garnham, N. (2003). A response to Elizabeth Jacka's "Democracy as Defeat." *Television & New Media*, 4(2), 193~200.
- Garnham, N. (2009).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3(2), 201~214.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dford, CA: Standford Univ. Press.
- Gunster, S. (2004). *Capitalizing on culture: Critical theory for cultural studie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 Gurevitch, M., Coleman, S., & Blumler, J. G. (2009). Political communication-Old and new media relationships.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 625, 164~181.
- Habermas, J. (1975). *Legitimation crisis*. Boston: Beacon Press.
- Habermas, J.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한승완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

- Habermas, J. (1992). Faktizität und Beltung. 한상진·박영도 역 (2000). 『사실성과 타당성』. 서울: 나남.
- Habermas, J. (2006). Political communication in media society: Does democracy still enjoy an epistemic dimension? The impact of normative theory on empirical research. *Communication Theory*, 16, 411~426.
- Hall, S. (1973/2003). Marx's notes on method: A 'reading' of the '1857 introduction'. *Cultural Studies*, 17(2), 113~149.
- Hall, C. (2005). The trouble with passion: Political theory beyond the reign of reason. NY: Routledge.
- Harrington, S. (2008). Popular news in the 21st century: Time for a new critical approach. *Journalism*, 9(3), 266~284.
- Hartley, J. (1999). *Uses of television*. London: Routledge.
- Hartley, J., & Green, J. (2006). The public sphere on the beach.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9(3), 341~362.
- Hebdige, D. (1996). The impossible object: Towards a sociology of the sublime. In J. Curran, D. Morley & V. Walkerdine(Eds.), *Cultural studies and communications*(pp. 66-95). London: Arnold.
- Hermes, J. (2005). *Re-reading popular culture*. Malden, MA: Blackwell.
- Hermes, J. (2006). Hidden debates: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r culture and the public sphere. *Javnost-the Public*, 13(4), 27~44.
- Hoggett, P., & Thompson, S. (2002). Toward a democracy of the emotions. *Constellations*, 9(1), 106~126.
- Hove, T. (2007). *Media Power: Habermas's late public sphere theor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Jacka, E. (2003). "Democracy as defeat": The importance of arguments for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elevision & New Media*, 4(2), 177~191.
- Jones, J. P. (2006). A cultur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ted citizenship. *Social Semiotics*, 16(2), 365~383.
- Jones, P. (2007). Beyond the semantic 'big bang': Cultural sociology and an aesthetics public sphere. *Cultural Sociology*, 1(1), 73~95.
- Jubas, K. (2007). Conceptual con/fusion in democratic societies. *Journal of Consumer Culture*, 7(2), 231~254.
- Karppinen, K. (2007). Against naive pluralism in media politics: On the implications of the radical-pluralist approach to the public sphere. *Media, Culture & Society*, 29(3), 495~508.
- Karppinen, K., Moe, H., & Svensson, J. (2008). Habermas, Mouffe and political communication: A case for theoretical eclecticism. *Javnost-the Public*, 15(3), 5~22.
- Kohn, M. (2000). Language, power, persuasion: Toward a critique of deliberative democracy. *Constellations*, 7(3), 408~429.
- Ku, A. S. (2000). Revisiting the notion of "public" in Habermas's theory-Toward a theory of politics of public credibility. *Sociological Theory*, 18(2), 216~240.
- Lamla, J. (2008). Consumer citizen: The constitution of consumer democracy in socioogical perspective. *German Policy Studies*, 4(1), 131~165.
- Lewis, J., Inthorn, S., & Wahl-Jorgensen, K. (2005). *Consumers or citizens? What the media tell us about political participation*. Meidenhead, U.K.: Open Univ. Press.
- Livingstone, S. (2005a). On the relation between audiences and publics. In S. Livingstone(ed.), *Audiences and publics*(pp. 17~42). Bristol: Intellect.
- Livingstone, S. (2005b). In defence of privacy: Mediating the public/privacy at home. In S. Livingstone(ed.), *Audiences and publics*(pp. 163~185). Bristol: Intellect.
- Livingstone, S., & Lunt, P. (2007). Representing citizens and consumers in media and communications regulation.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 611, 51~66.

- Loehwing, M. & Motter, J. (2009). Publics, counterpublics, and the promise of democracy. *Philosophy & Rhetoric*, 42(3), 220~241.
- Lunt, P., & Stenner, P. (2005). The Jerry Springer Show as an emotional public sphere. *Media, Culture & Society*, 27(1), 59~81.
- McGuigan, J. (1992). *Cultural populism*. London: Routledge.
- McGuigan, J. (2005). The cultural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8(4), 427~443.
- McKee, A. (2005). *The public sphere: An introduc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 Mouffe, C. (2005). *On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 Mutz, D. (2006). *Hearing the other side*. NY: Cambridge Univ. Press.
- O'Connor, B., & Klaus, E. (2000). Pleasure and meaningful discours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3(3), 369~387.
- Örnebring, H. & Jönsson, A. (2004). Tabloid journalism and the public sphere: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abloid journalism. *Journalism Studies*, 5(3), 283~295.
- Peters, J. D. (1993). Distrust of representation: Habermas on the public sphere. *Media, Culture & Society*, 15(4), 541~571.
- Philips, A. (1997). From inequality and difference: A severe case of displacement. *New Left Review*, 224, 143~153.
- Richards, B. (2004). The emotional deficit in political communic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1, 339~352.
- Scammell, M. (2003). Citizen consumers: Towards a new marketing of politics? In J. Corner & D. Pels(Eds.), *Media and restyling of politics*(pp. 115~136). London: Sage.
- Schudson, M. (1998). *The Good citizen: A history of American civic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Schudson, M. (2000). Good citizens and bad history: Today's political ideals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Communication Review*, 4(1), 1~19.
- Schudson, M. (2006). The troubling equivalence of citizen and consumer.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 608, 193~204.
- Schudson, M. (2007). Citizens, consumers, and the good society.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 611, 236~249.
- Simons, J. (2002). Governing the public: Technologies of mediation and popular culture. *Cultural Value*, 6(1/2), 167~181.
- Simons, J. (2008). Aestheticisation of politics: From fascism to radical democracy.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12(3), 207~229.
- Sinekopova, G. V. (2006). Building the public sphere: Bases and biases. *Journal of Communication*, 56, 505~522.
- Sparks, C. (2000). Introduction: The panic over tabloid news. In C. Sparks & J. Tulloch(Eds.), *Tabloid tales: Global debates over media standards*(pp. 1~42). Lanham, MA: Rowman & Littlefield.
- Stevenson, N. (2003). Cultural citizenship on the "cultural" society: A cosmopolitan approach. *Citizenship Studies*, 7(3), 331~348.
- Street, J. (2000). Aesthetics, policy and the politics of popular cultu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3(1), 27~43.
- Tulloch, J. (2007). Tabloid citizenship: The Daily Mirror and the invasion of Egypt(1956) and Iraq(2003). *Journalism Studies*, 8(1), 42~60.
- Van Zoonen, L. (2005). *Entertaining the citizen: When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converge*. Lanham, MA: Rowman & Littlefield.

- Verstraeten, H. (2004).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s: Implications for media assessment and accountability. *Communications*, 29, 43~58.
- Wahl-Jorgensen, K. (2008). Disgust, pleasure and the failure of the liberal democratic model: Tabloid talk, media capital and emotional citize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Politics*, 4(2), 145~161.
- Weintraub, J. (1997). The theory and politics of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In J. Weintraub & K. Kumar(Eds.),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Perspectives on a grand dichotomy*(pp. 1~42).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투고일자: 2010.2.28, 수정일자: 2010.4.14, 게재확정일자: 2010.4.19)

ABSTRACT

A Typology of Media–Public Sphere Relationships

Hang-Je Cho* · Hong-Won Park**

The theoretical scope of the public sphere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as a result of new academic inquiries into the nature of the political and the public in contemporary societies. While appreciating the value of the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for understanding democratic roles of the media, scholars began to raise questions on Habermasians' exclusive focus on news and public affairs programs, arguing that various entertainment programs also can invoke political deliberation. Terms like affective public sphere, emotional public sphere, aesthetic public sphere, expressive public sphere were used to capture this new conception.

To comprehen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conceptual expansion of the public sphere for media studie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a typology of media-public sphere relationships. By using public-private and rational-emotional axes as two criteria for classification, we created four prototypes of the public sphere (i.e., political public sphere, populism, difference pluralism, and intimacy/privacy) an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fter setting out media communication as a form of meta-public sphere that mediates and coordinates the four different types of the public sphere, we presented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an exemplar meta-public spher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of multiple social antagonisms and differences.

Keywords: public sphere, typology, pluralism, populism

* Pusan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